경기변동이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김 재 호 · 정 주 연[1)]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1)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 가구의 주관적 경기변동이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평균소비성향과 탄력도를 곱해서 도출한 한계소비성향은 5분위 보다 높지만 2, 3, 4분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크기가 작은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2, 3, 4분위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2, 3, 4분위의 중산층의 소득강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경기변동이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1분위에서만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모든 분위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이번기의 소득이 전기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만 2, 3, 4, 5분위의 경우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Ⅰ. 서론

2000년대 초반까지도 5%를 유지하던 GDP성장률이 최근에 2~3%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는 가계의 소비활동이 2%대 성장에 머물면서 민간소비 위축이 경제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불평등을 소비지출의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홍정효, 2018[2)]).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켜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즈안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최근의 경제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가 총수요측면의 내수와 소비부족 그리고 소득분배불균형으로 보고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증대되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계소비가 경제성장(GDP)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계소비(민간소비)의 결정요인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기변동론[3)]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1) 김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초빙연구위원(ksud71@kli.re.kr)
정주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juyeonjeong@naver.com)

2) 홍정효(2018)는 민간소비 증감률과 설비투자증감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성장률에 강한 예측력을 니지고 있어 경제성장제고를 위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3) 경기변동이란 거시적으로 생산, 고용, 소비, 투자, 무역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장기성장추세치를 중심으로 확장과 수축의 순환국면을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다(송원호, 1998, 지혜경.이은영, 1999 재인용).

그런데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를 파악한다. 특히 단기의 소비함수는 심리적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에 따라 가구주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미시적으로 가계의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구주라고 가정하면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재무계산능력의 차이를 가져와 위험수용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손지연・주소현, 2016). 즉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불황일 때 이를 인지하고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소비를 증대시켜 미충족되던 소비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계소비의 결정자가 근시한적이거나 재무계산능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소비행태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주는 이를 호황으로 간주하고 소비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구주의 재무계산능력이 낮을 경우 호황에 소비를 늘이지 않고 불황에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미시적으로 가구주는 거시적 지표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판단한다고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의 호황과 불황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기변동의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계의 전기소득과 현재의 소득을 비교하여 감소하면 불황, 증가나 유지하면 호황이라는 조작적 정의한다. 평균소바성향은 케인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한계소비성향보다 높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킨다면 한계소비성향보다 평균소비성향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재 연구과제로 가계의 경제상태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노동패널조사가 1998년을 1차로 2018년까지 21차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의 시계열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가 사라진 2010년부터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구소득의 분위를 분류하기 위해 노동패널의 통합가중치를 반영하여 5분위를 구분했다.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 선행연구마다 가구균등화여부가 달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했다.

본 연구는 (1)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기 위해 평균소비성형과 단기소비함수의 탄력도를 도출한다. 그리고 (2) 가구주의 재무계산능력의 차이가 있어 경기변동이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Ⅱ. 선행연구

소득계층별 소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임병인, 윤재형(2014)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4]) 한계소비성향의 추이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이 하향추세를 보여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미래소비에 대비해 현재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가구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추세는 점차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와 고령화 추세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득양극화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고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소비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임병인, 윤재형(2014)에서 주장하는 한계효과는 소득의 회귀계수로 이는 단기소비함수의 소비의 소득탄력도에 해당한다. 후술하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은 단기소비함수의 소비의 소득탄력도를 평균소비성향을 곱해 도출한다.

이진희, 송철종(2019)은 임병인, 윤재형(2014)와 동일하게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차이점은 1인 가구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2006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기간을 확대하여 2006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가구원수를 별도의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임병인, 윤재형(2014)과 달리 가구소득과 소비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로그를 취해 사용하였다.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안정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증대효과가 소비진작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Ⅲ.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1차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가구소비행태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은 제외하고 201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1차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2017년까지의 8년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노동패널에서 가구소득은 조사시점의 전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계지출은 작년 한 해 동

4) 소득계층을 중위소득의 50%를 저소득, 50%이상 150%이하를 중산층, 그리고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

안 소비한 생활비로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는 2차(1999년 기준)부터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와는 달리 해당년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한 반면, 소득과 소비의 경우 및 저축과 관련된 변수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들 양자간의 시계열적 일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 자료는 13차~20차 자료(2010년~2017년 조사연도 기준자료)를 그리고 소득 및 소비 자료는 14차~21차(2011년~2018년 전년도 기준자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8년간(2010년~2017년)의 시차를 동일 연도 기준으로 일치시킨 매칭자료(matching data)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변수(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가구원수, 주택보유여부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각 년도별 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처분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가구주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경우와 가구균등화소득으로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다.

또한 경기상태에 대한 가구주의 인식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가계의 연간총소득을 t-1기와 t기를 비교하여 t-1기의 소득이 t기의 소득보다 큰 경우와 t-1기 소득이 t기소득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더미변수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 구성 및 설명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소비지출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통신비, 피복비, 대중교통비, 생필품구입비 포함
가계연간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으로 자영업자의 소득도 포함
금융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주식, 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 정부보조금, 근로장려세제,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기타소득	보험금(손해, 저축성, 종신), 퇴직금, 증여/상속, 축의금, 조의금, 당첨상금, 재해보상금, 기타
가계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가계총부채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등
원리금상환액	부채 원금+이자

연령	연령
성별	여성=0, 남성=1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 수도권 외=0
교육년수	교육년수로 환산(미취학,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2년제=14, 4년제=16, 대학원석사=18, 대학원박사=21)
소득분위	소득1분위=1, 소득2분위=2, 소득3분위=3, 소득4분위=4, 소득5분위=5
가계소득 변화	가구총소득이 t-1기>t기=0, t-1기≦t기=1

2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을 기초통계량을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주의 성별은 2010년 78%였던 남성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3.03세에서 55.99세로 상승하였다. 둘째, 가구주의 교육년수는 2010년 11.15년에서 2017년 11.77년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과 그 외지역의 비율이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주택의 자가여부는 전·월세, 기타의 유형이 39%에서 37%로 하락하였으며, 자가의 비율이 61%에서 63%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저금리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풀어주면서 많은 가계가 주택을 매입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가구원수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평균가구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표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 세,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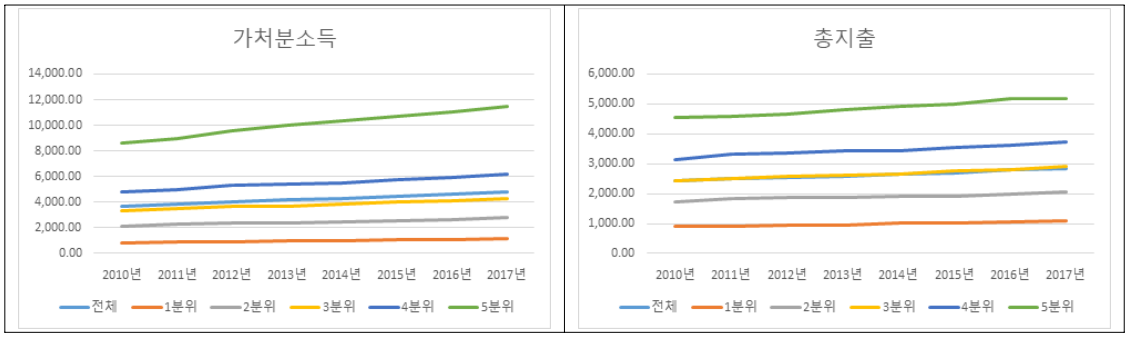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별	남성	0.78 (0.417)	0.77 (0.419)	0.77 (0.419)	0.77 (0.423)	0.77 (0.420)	0.77 (0.423)	0.76 (0.425)	0.76 (0.426)
	여성	0.22 (0.417)	0.23 (0.419)	0.23 (0.419)	0.23 (0.423)	0.23 (0.420)	0.23 (0.423)	0.24 (0.425)	0.24 (0.426)
연령		53.03 (15.223)	53.49 (15.276)	54.00 (15.312)	54.48 (15.437)	54.89 (15.551)	55.35 (15.622)	55.70 (15.721)	55.99 (15.771)
교육년수		11.15 (4.510)	11.25 (4.477)	11.31 (4.453)	11.38 (4.459)	11.48 (4.417)	11.55 (4.385)	11.64 (4.354)	11.77 (4.312)
거주지역	수도권외	0.54 (0.499)	0.53 (0.499)	0.54 (0.499)	0.54 (0.499)	0.54 (0.498)	0.54 (0.498)	0.54 (0.498)	0.54 (0.499)
	수도권	0.46	0.47	0.46	0.46	0.46	0.46	0.46	0.4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499)	(0.499)	(0.499)	(0.499)	(0.498)	(0.498)	(0.498)	(0.499)
입주형태	기타(전·월세, 기타)	0.39	0.39	0.39	0.39	0.39	0.38	0.37	0.37
		(0.489)	(0.488)	(0.488)	(0.487)	(0.487)	(0.484)	(0.484)	(0.484)
	자가	0.61	0.61	0.61	0.61	0.61	0.62	0.63	0.63
		(0.489)	(0.488)	(0.488)	(0.487)	(0.487)	(0.484)	(0.484)	(0.484)
가구원수		2.84	2.82	2.80	2.77	2.76	2.72	2.69	2.68
		(1.313)	(1.310)	(1.308)	(1.304)	(1.300)	(1.302)	(1.289)	(1.285)
관측치수		5,976	6,030	6,062	6,152	6,207	6,292	6,392	6,435

주: ( )는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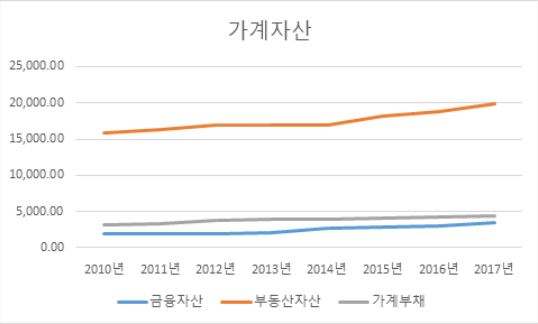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2010년~2017년 자료 기준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볼 수 있는 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 및 부채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와 각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및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전승훈·신영임(2009), 이정현 외(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가계가 소비의 부족한 부분을 부채의 차입을 통해 소비생활을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가구의 총자산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자산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자산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부채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가계자산



Ⅵ. 실증분석

1. 한계소비성향 추정

(1) 단기소비함수 추정

임병인・윤재형(2014)와 이진희・송철종(2019)은 동일한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단기소비함수를 나타내지만 이진희・송철종(2019)은 가구균등화 소득과 소비를 균등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연령의 제곱을 추가하여 연령에 한계체감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단기소비함수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C_{it} = \beta_0 + \beta_1 \ln Y_{it} + \beta_2 \ln A_{it} + \beta_3 \ln D_{it} + \beta_4 X_{it} + \varepsilon_{it}$$ [5)]

$\ln C_{it}$는 i가계의 t시점에 가계소비이며, $\ln Y_{it}$는 가계의 연간총소득을 로그취한값, $\ln A_{it}$는

---

5) 임병인.윤재형(2014)의 단기소비함수는

$C_i = \alpha_1 y_i + \alpha_2 age_i + \alpha_3 mem_i + \alpha_4 edu_i + \alpha_5 job_i + \alpha_6 emp_i + \alpha_7 resd_i + \alpha_8 dum_i + \epsilon_i$

으로 C_i: 가구소비, y_i: 가처분소득, age_i: 연령, mem_i: 가구원수, edu_i: 교육수준, job_i: 직업, emp_i: 취업자 수, $resd_i$: 주거보유상태, dum_i: 예기치 못한 소비 더미(소비가 소득의 200% 이상이면 1, 아니면 0)이며

이진희.송철종(2019)의 단기소비함수는

$\log C_i = \beta_0 + \beta_1 \log DI_i + \beta_2 EMPR_i + \beta_3 Worker_i + \beta_4 SEX_i + \beta_5 AGE_i + \beta_6 AGE_i^2 + \beta_7 EDU_i + \beta_8 HOUSE_i + \epsilon_i$

i는 가구를 의미하며, C_i는 가계의 소비, DI_i는 가처분소득으로 균등화를 위해 가구원의 제곱근으로 나눈뒤 로그변환, $EMPR_i$은 가구원중 취업자의 비율, $WORKER_i$의 경우 노동자는 1, 그렇지 않으면 0, SEX_i는 가구주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HOUSE_i$는 주택 소유여부, EDU_i는 가구주의 교육연수

로그 자산변수 값, $\ln D_{it}$는 로그 부채변수 값이며, X_{it}는 가구주의 인적·사회적 변수로 성별, 연령, 연령제곱, 학력(연수), 수도권 거주여부, ε_{it}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소비함수에 근거하여 각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단기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단기소비함수는 2010년~2017년까지 매년 추정되었으며 아래 <표>에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 첫째, 가구 경제상태 변수인 가구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그리고 가계부채는 전 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소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득의 추정 계수값은 0.385~0.441 사이에 있으며,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자산의 계수값은 0.004~0.012, 부동산자산은 0.010~0.017, 가계부채는 0.003~0.005 사이에 있으며, 가계소득이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가구주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은 전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주의 연령제곱 변수에서는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정연령까지 가계소비가 증가하다가 은퇴기와 고령연령이 되면 소비가 감소하는 라이프사이클 패턴에 의해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가구원 수, 가구주의 학력, 거주지역 변수 역시 전 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추정계수 값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입주형태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가인 경우가 전·월세 및 기타의 입주형태에 비해 소비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정결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2010년대 이후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구에서 주택의 구입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분석기간에는 주택의 70~80%정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구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3> 각 연도별 단기소비함수 추정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ln_가구소득	0.3880***	0.4365***	0.4413***	0.4381***	0.4193***	0.4259***	0.4201***	0.3856***
	(0.4889)	(0.5391)	(0.5471)	(0.5481)	(0.5374)	(0.5355)	(0.5301)	(0.4910)
ln_금융자산	0.0122***	0.0058***	0.0045***	0.0051***	0.0060***	0.0066***	0.0060***	0.0112***
	(0.0607)	(0.0292)	(0.0230)	(0.0260)	(0.0310)	(0.0338)	(0.0307)	(0.0551)
ln_부동산자산	0.0176***	0.0119***	0.0124***	0.0137***	0.0104***	0.0100***	0.0106***	0.0107***
	(0.1092)	(0.0751)	(0.0788)	(0.0880)	(0.0692)	(0.0670)	(0.0717)	(0.0735)
ln가계부채	0.0046***	0.0030***	0.0032***	0.0044***	0.0054***	0.0052***	0.0033***	0.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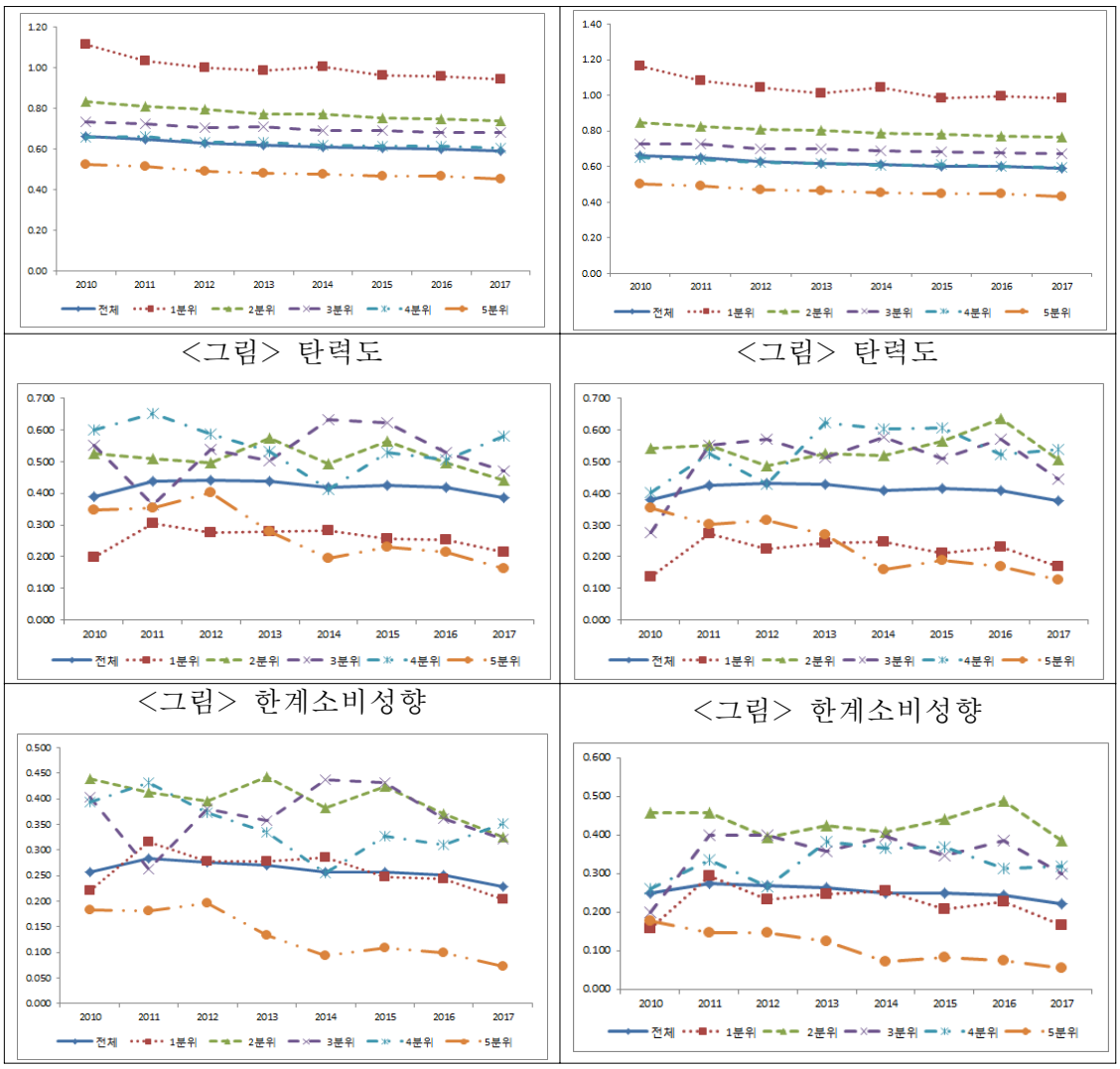
	(0.0259)	(0.0173)	(0.0188)	(0.0261)	(0.0329)	(0.0321)	(0.0208)	(0.0365)
가구주성별 (남성=0, 여성=1)	-0.0352***	-0.0453***	-0.0587***	-0.0478***	-0.0583***	-0.0328***	-0.0460***	-0.0558***
	(-0.0200)	(-0.0262)	(-0.0340)	(-0.0281)	(-0.0352)	(-0.0200)	(-0.0285)	(-0.0349)
가구주연령	0.0207***	0.0195***	0.0187***	0.0178***	0.0139***	0.0160***	0.0184***	0.0174***
	(0.4293)	(0.4108)	(0.3965)	(0.3810)	(0.3112)	(0.3612)	(0.4214)	(0.4039)
$(연령)^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5207)	(-0.4879)	(-0.4783)	(-0.4620)	(-0.4001)	(-0.4452)	(-0.5082)	(-0.4940)
학력 (교육년수)	0.0251***	0.0225***	0.0196***	0.0211***	0.0182***	0.0195***	0.0201***	0.0223***
	(0.1543)	(0.1388)	(0.1206)	(0.1308)	(0.1156)	(0.1231)	(0.1276)	(0.1414)
거주지역 (수도권=1, 수도권외=0)	0.0364***	0.0320***	0.0482***	0.0459***	0.0434***	0.0640***	0.0475***	0.0458***
	(0.0247)	(0.0220)	(0.0333)	(0.0318)	(0.0311)	(0.0460)	(0.0345)	(0.0336)
가구원수	0.1472***	0.1410***	0.1353***	0.1279***	0.1313***	0.1296***	0.1351***	0.1374***
	(0.2630)	(0.2542)	(0.2451)	(0.2318)	(0.2455)	(0.2434)	(-0.0358)	(0.2594)
입주형태 (자가=1, 전·월세,기타 =0)	-0.0790***	-0.0405**	-0.0585***	-0.0678***	-0.0435**	-0.0412**	-0.0507***	-0.0587***
	(-0.0526)	(-0.0272)	(-0.0395)	(-0.0459)	(-0.0305)	(-0.0287)	(0.018)	(-0.0418)
Constant	3.2656***	2.9974***	3.0381***	3.0836***	3.3780***	3.2406***	3.2454***	3.4935***
	(.)	(.)	(.)	(.)	(.)	(.)	(.)	(.)
Observations	5,976	6,030	6,060	6,151	6,204	6,292	6,390	6,435
R-squared	0.794	0.813	0.804	0.804	0.804	0.799	0.813	0.810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표준화 계수값

이상의 탄력도와 함께 분위별 탄력도를 추정하여 평균소비성향과 곱하여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소비성향은 1분위가 가장 높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고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할 때 소비가 더 많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소비함수에서 도출한 탄력도 역시 가구균등화여부와 무관하게 1분위가 탄력도가 낮고 2014년부터 5분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 3, 4분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평균소비성향과 탄력도를 곱해서 도출한 한계소비성향은 5분위 보다 높지만 2, 3, 4분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6)]

비가구균등화(가구원수포함)	가구균등화
<그림> 평균소비성향	<그림> 평균소비성향

6) 이같은 결과가 패널조사의 한계인지는 좀 더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처럼 횡단면 조사의 경우 매년 새로운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패널조사의 경우 기존의 패널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측치들의 갑작스런 경제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림> 탄력도

<그림> 탄력도

<그림> 한계소비성향

<그림> 한계소비성향

크기가 작은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2, 3, 4분위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2, 3, 4분위의 중산층의 소득강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기침체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변동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APC_{it} = \beta_0 + \beta_1 APC_{it-1} + \beta_2 D.Y_{it} + \beta_3 D.B_t + \beta_4 X_{it} + \beta_5 \ln A_{it} + \beta_6 D_{it} + \varepsilon_{it}$$

여기에서 APC_{it}는 i가계의 t시점에 평균소비성향이며, APC_{it-1}은 $t-1$기의 평균소비성향, $D.Y_{it}$는 소득분위 더미, $D.B_t$는 경기더미변수로 i가계의 가구총소득이 $t-1$기 $> t$기 $= 0$, $t-1$기 $\leq t$기 $= 1$인 경우 더미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X_{it}는 인적·사회

적 변수, $\ln A_{it}$는 자산변수, $\ln D_{it}$는 부채변수이며 ε_{it}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널자료 분석시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하여 적정한 패널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Hausman test 추정결과, Hausman 검정통계량이 19.74이었으며, p-value가 0.18으로 검정통계치가 유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는 평균소비성향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1)~모형(4)의 차이점은 설명변수에 가구소득, 소득분위 더미변수 그리고 가계소득 변화 더미변수의 포함여부로 가계소득 변화 더미는 가계소득을 t-1기와 t기의 변화를 비교하여 t기의 소득이 t-t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1, t-t기보다 작은 경우=0으로 더미변수로 하였다. 먼저 설명변수에 가구소득을 포함한 모형(1)과 모형(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주의 성별이나 거주지역, 입주형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교육년수), 그리고 가구원 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둘째,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차은영(1996), 김진웅・노영진(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추정되어 자산에 대한 부의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계가 소비하는데 있어 예산제약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경우 분석결과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평균소비성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가계부채가 차입제약을 통해 소비를 제약하기 보다는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2)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가계소득변화 더미변수는 t기에 가계소득이 t-1기 소득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3)은 설명변수인 가구소득 대신 소득분위 더미변수로 대체하였으며 모형(4)는 소득분위와 가계소득 변화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3)과 모형(4) 모두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입주형태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더미변수를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음(-)의 추정계수 값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가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을 더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1)	(2)	(3)	(4)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0.0064	-0.0448	0.0373	0.0525
	(0.071)	(0.071)	(0.073)	(0.073)
가구주 연령	0.0543***	0.0484***	0.0175	0.0205*
	(0.012)	(0.012)	(0.012)	(0.012)

$(연령)^2$	-0.0005***	-0.0005***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학력(교육년수)	0.1269***	0.1254***	0.0350***	0.0375***
	(0.010)	(0.010)	(0.010)	(0.010)
거주지역 (수도권=1, 수도권 외=0)	0.0474	0.0529	0.0279	0.0257
	(0.065)	(0.065)	(0.067)	(0.067)
가구원수	0.3566***	0.3805***	0.1436***	0.1338***
	(0.022)	(0.022)	(0.023)	(0.023)
주택 자가여부 (자가=1, 전·월세, 기타=0)	-0.0793	-0.0907	-0.0108	-0.0069
	(0.068)	(0.068)	(0.071)	(0.071)
ln_가구소득	-1.8567***	-1.9986***	-	-
	(0.024)	(0.026)	-	-
소득분위 소득2분위	-	-	-1.1847***	-1.1454***
	-	-	(0.048)	(0.048)
소득분위 소득3분위	-	-	-1.5113***	-1.4419***
	-	-	(0.055)	(0.056)
소득분위 소득4분위	-	-	-1.7108***	-1.6141***
	-	-	(0.060)	(0.062)
소득분위 소득5분위	-	-	-1.9598***	-1.8288***
	-	-	(0.067)	(0.070)
가계소득 변화 (가계소득이 t-1기>t기=0, t-1기≦t기=1)	-	0.3387***	-	-0.1500***
	-	(0.023)	-	(0.023)
ln_금융자산	0.0321***	0.0355***	0.0041	0.0031
	(0.004)	(0.004)	(0.004)	(0.004)
ln_부동산자산	0.0184**	0.0211***	-0.0001	-0.0012
	(0.007)	(0.007)	(0.008)	(0.008)
ln_가계부채	0.0119***	0.0126***	0.0049	0.0046
	(0.004)	(0.004)	(0.004)	(0.004)
Constant	11.6726***	12.8498***	1.0668***	0.9402***
	(0.376)	(0.384)	(0.361)	(0.361)
Observations	49,538	49,538	49,538	49,538
Hausman test(p-value)	19.74(0.18)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 13차~21차 자료

아래 <표5>는 각 소득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변수들이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1분위 가구만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1분위 가구에 고령가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나 가구원 수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은 소득3, 4, 5분위 가구

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형태의 경우 소득2분위와 3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기변동은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1분위에서만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모든 분위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이번기의 소득이 전기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t기에 소득의 증가가 t+1기에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소비를 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바로 소비로 연결되어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만 2, 3, 4, 5분위의 경우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늘어난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침체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행위를 통해 소비가 줄어 가구소득 역시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평균소비성향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자산은 소득1, 2, 5분위에서만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동산자산의 경우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변수는 소득1, 2분위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부채차입으로 소비를 충당하고 있어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5>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성별 (남성=0, 여성=1)	0.1512	-0.0015	-0.0054	0.0016	-0.0011
	(0.185)	(0.009)	(0.008)	(0.008)	(0.008)
가구주연령	-0.1456***	0.0122***	0.0145***	0.0157***	0.0135***
	(0.036)	(0.002)	(0.001)	(0.001)	(0.001)
(연령)^2	0.0013***	-0.0001***	-0.0001***	-0.0001***	-0.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학력(교육년수)	0.1500***	0.0165***	0.0138***	0.0119***	0.0139***
	(0.030)	(0.001)	(0.001)	(0.001)	(0.001)
거주지역 (수도권=1, 수도권 외=0)	-0.3420	0.0112	0.0186***	0.0184***	0.0268***
	(0.256)	(0.008)	(0.006)	(0.005)	(0.005)
가구원수	0.4125***	0.1033***	0.0711***	0.0629***	0.0532***
	(0.080)	(0.003)	(0.002)	(0.002)	(0.002)
주택 자가여부	-0.0486	-0.0331**	-0.0247***	-0.0039	0.0085

(자가=1, 전·월세, 기타=0)	(0.209)	(0.014)	(0.009)	(0.007)	(0.006)
가계소득 변화 (가계소득이 t-1기>t기=0, t-1기≦t기=1)	0.6501***	-0.0123***	-0.0147***	-0.0124***	-0.0177***
	(0.047)	(0.004)	(0.003)	(0.003)	(0.003)
ln_가구소득	-3.6419***	-0.4173***	-0.3087***	-0.2892***	-0.2828***
	(0.053)	(0.013)	(0.014)	(0.012)	(0.005)
ln_금융자산	0.0238***	0.0025***	-0.0006	0.0005	0.0012**
	(0.009)	(0.001)	(0.001)	(0.001)	(0.001)
ln_부동산자산	0.0033	0.0070***	0.0042***	0.0026***	0.0017**
	(0.022)	(0.001)	(0.001)	(0.001)	(0.001)
ln_가계부채	0.0182*	0.0014**	0.0007	0.0007	0.0000
	(0.011)	(0.001)	(0.001)	(0.000)	(0.000)
Constant	28.0575***	3.2939***	2.4845***	2.3249***	2.3165***
	(1.316)	(0.107)	(0.114)	(0.104)	(0.057)
Observations	11,992	9,882	9,772	9,289	8,60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 13차~21차 자료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저성장의 주요 원인을 제기되고 있는 소비부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1)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 가구의 주관적 경기변동이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평균소비성향은 1분위가 가장 높고 2,3,4,5분위로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할 때 소비가 더 많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소비함수에서 도출한 탄력도 역시 가구균등화여부와 무관하게 1분위가 탄력도가 낮고 2014년부터 5분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 3, 4분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평균소비성향과 탄력도를 곱해서 도출한 한계소비성향은 5분위 보다 높지만 2, 3, 4분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크기가 작은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2, 3, 4분위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2, 3, 4분위의 중산층의 소득강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경기변동이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1분위에서만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모든 분위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이번기의 소득이 전기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t기에 소득의 증가가 t+1기에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소비를 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바로 소비로 연결되어 평균소비성향에 양(+)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만 2, 3, 4, 5분위의 경우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병인・윤재형, 2014, 우리나라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2014년 4월, pp.585~605

손지연・주소현, 2017, 소비자의 재무계산능력과 위험수용성향의 관계분석, 소비자학연구, 제27권 제6호, 2016년 12월, pp.105~127

홍정효, 2018, 설비투자, 소비 및 저축률과 경제성장률(GDP)간의 인과성 연구, 기역산업연구, 제41권 제4호, pp.313~326